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8일 월요일 음 1월 25일 (2물)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8℃, 낮 최고기온은 13-15℃로 예상되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의 풍랑특보는 해제될 예정이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Humidity (습도). Rows show humidity percentages for different times.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물때) and Temperature (기온). Rows show sunrise/sunset times and high/low temperatures.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날씨, 기온). Rows show weather forecasts and temperature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식중독, 감기) and Status (상태). Rows show status for various categories.

월드뉴스

지구촌 곳곳 코로나 통제 반대시위

미국에서 마스크 화형식 스웨덴은 '노마스크' 시위



마스크를 불태우는 사람들.

지구촌 곳곳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정부 통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선 300-500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메드보리아르플라첸 광장에 집결해 정부 방역 지침에 항의했다.

시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는 '프리덤 스웨덴'이라는 단체가 주최했으며, 극우 활동가와 백신 반대주의자들이 참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통제 대신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전략을 취했다. 집단면역이란 특정 집단 구성원 대다수가 면역을 생겨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통제정책을 펼친 주변국에 비해 확진자, 사망자 규모가 급증하며 피해가 커지자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엄격한 제한조치로 선회했다. 미국 아이다호주(州) 주의회 앞에서도 최소 100명이 모여 마스크를 불태우며 방역 조처에 항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시위 영상을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불에 던져넣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백록담



고 대 로

정치부장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게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 4·3사건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

“올해는 4·3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상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4·3에 자행된 폭력의 대부분이 국가의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방기해 왔다.

특히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문제를 공약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재정부담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3사건 보상금으로 총 1조5394억4400만원을 추계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6·

25 전정 전후 민간인 학살, 반민주 반인권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보상 규모가 4조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 부담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재정부담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후 지난 21년동안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게 배·보상문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이에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심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마련하되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

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4·3을 왜곡하는 보수단체들의 막말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지는 추념 행사와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사료관 건립,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에 국비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위자료 지원액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속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지난 70여년동안 힘든 세월을 살아온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길 바란다.

열린마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신청하세요



권 미 숙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중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선 법정 등·리별로 위촉돼 있는 5명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양 행정시 대장 소관청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행정시에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후 이해관계인 등에게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와 2개월간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 확인서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현행 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법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제 도입으로 보증인 5명 중 전전자격을 가진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하므로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미전 등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 규정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유 재산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동 지역 '묘지' 적용 관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도 조속히 개정되기를 염원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 승 봉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소방시설 고장방지 및 비상구를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모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지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나이·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인터넷·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건당 5만원(1인 최대 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도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포상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불법행위를 신고해 주길 바란다.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Fire Alarm system, including contact info and benefits.

Advertisement for car purchase service, including benefits like trade-in and financing.